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다산 정약용과 무등산

모티브는 대체로 무등의 신령스러운 기운에서 비롯하고 있다는 것을 집착하기에 충분하다. 70년대 중반, 무등산은 큰 애를 만삭의 몸으로 안고 있다가, 끝내는 5·18 피를 뿌리며 출산했으니 오랜 군부 독재를 물리치는 역사 창조와 융트림이었다. 조국의 민주화를 이룩해 낸 혁명적 창조 행위였다.

250년 전 다산 정약용은 아버지가 화순현감으로 부임하자, 가족들과 함께 2년 가까이 화순 생활을 보냈다. 16·17세 이던 1778년 전후의 시기였다. 15세에 결혼했으니 성년이지만 실제로는 소년 시절이었다. 특히 17세의 가을, 무등산 일대의 아름다운 명승지를 대부분 탐방하고,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시와 기행문을 남겼다. 그 시절의 호남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었는가를 알게 해 준다.

화순 만연사 절의 '동림사(東林寺)'라는 절에서 형제들이 독서하며 토론했던 시와 기행문이었고, 화순 동북쪽 적벽강과 물결정(勿缺亭)을 관람한 시와 기행문이 있다. 서석산(무등산)을 등산하여 읊었던 시와 기행문도 남겼다. 동림사에서 독서하면서 읊었던 세 편의 시와 세 편의 기행문은 10대 소년 다산이 호남의

자연과 사람들의 의혼을 체험하고 알아낸 귀중한 자료다. '유서석산기'(遊瑞石山記)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석산의 다른 이름인 '무등산' 정기(精氣)가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런 무등산 정기의 공화(功化)로 위대한 조선의 역사가 창조되고 있었음을 은근한 내용으로 암시해 준다. "우혹한 모습은 마치 거인(巨人)과 위사(位士)가 말하지도 웃지도 아니하고 조정에 앉아 비록 움직이는 흔적을 볼 수 없으니, 그의 공화(功化)는 사물에 널리 비치는 것 같다." (屹然若巨人偉士不言不笑坐於廟堂之上雖不見其旋爲動作之跡而其功化之物廣矣) "웃지도 말하지도 않으면서도 역사가 가야할 방향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고 있는 산이 바로 무등산"이라는 사려 깊은 통찰이다.

산에 올라 읊은 시에는 "올라오려 할 때는 까마득하더니/ 멀리 오자 산하가 낮게 깔렸네/ 모난 행실이야 바로 탄로 나지만/ 지극한 덕이야 가려서 분별하기 어렵다네(至德難辨)"라고 말하여 등급을 매길 수 없이(無等) 아름답고 높은 산이 있다. 서석산(무등산)을 등산하여 읊었던 시와 기행문도 남겼다. 동림사에서 독서하면서 읊었던 세 편의 시와 세 편의 기행문은 10대 소년 다산이 호남의

다산은 정확히 말했다.

기행문에서 그는 "광장이 높은 산이다. 가운데 봉우리의 정상에 서면 날 듯 한 기분이 들고, 세상을 가볍게 보고 혼자서 특별히 다른 길은 가는 기분이 들어, 인생의 고락(苦樂)은 마음에 들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표현했다. 산의 정상에 오르면 하늘로 날아가는 기분을 느끼게 되어, 속세의 번잡한 생각들은 모두 사라지고, 곱거나 즐겁거나 삶의 아픔 같은 것은 모두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뜻을 담았다.

다산은 서울과 화순을 오고 가던 소년 시절, 광주를 두 번째로 지나면서 '중과광주'(重過光州)라는 시를 읊은 적도 있다. 그 시에서도 조선의 명장(名將)이자 큰 인물이던 금남군(鎭南君) 정충신(鄭忠愼)이 무등산의 정기로 태어났다고 읊었다. 참으로 훌륭한 의병대장 충장공 김덕령 장군은 무등산이 낳은 일세의 영웅임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광주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큰 길이 금남로와 충장로다.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충장로의 명칭이 나왔고, 정충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금남로의 명칭이 나왔다. 무등산은 광주정신을 창조해 내는 정기가자 모태임이 틀림없다.

꿈꾸는 2040



차승세
위민연구원 이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완전한 재택근무는 없다

사무실에 출근한다. 오토매틱 CEO 매트 플렌웨그는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일 잘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집중 잘 되는 시간, 휴식 취하는 시간이 다르다. 언제, 어디서 일하느냐보다 똑똑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시행하다 좌절한 기업도 많다. IBM은 일찍 1990년부터 원격 근무를 도입했지만 '개인보다는 팀으로 움직일 때 조직은 더 강력해지고 창의적으로 변한다'며 재택근무를 폐지했다. 최근에는 전 직원이 원격 근무를 하던 스타트업도 직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소프트웨어 회사 '베이스캠프'는 기존 사무실을 확장해 집처럼 만들었다. '집처럼 편한 사무실'을 만들면 재택근무의 단점을 줄이고 집단 근무의 장점인 '협업' 문화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협업을 통한 조직의 역량은 개개인의 역량을 더한 총량보다 크다. 개개인의 역량을 곱했을 때 나온다는 관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로의 완전한 전환은 어렵다. 첫째, 재택근무는 주어진 일만 하기에 좋지만 협업을 통한 창의적인 일에는 취약하기 때문이다. 미국 비즈니스 칼럼니스트 케빈 루스는 뉴욕

타임즈 기고문 통해 "재택근무는 통근할 필요도 없고, 다른 직원에게 방해받을 일도 없고, 집까지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적어도 다른 이들과 가까이서 함께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무실 근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면 회의를 중요하게 여겼던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도 "네트워크 시대에는 이메일과 채팅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것은 미친 것이다. 창의성은 즉흥적인 회의와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토론에서 비롯된다"라고 주장했다.

둘째,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자 외로움을 타는 동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혼자 일하는 게 지속될 경우 '코로나 블루'의 발병이 우려된다. 신생 스타트업의 경우 혼자 일하기보다 공유 사무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공감이나 협력' 같은 사람다운 특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무실과 집이 구분되지 않으면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자기통제가 쉽지 않은 사람의 경우 불규칙한 근무 시간으로 신체 리듬을 깨뜨려 업무 효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재택근무가

유연 근무를 동반하기도 하지만 업무의 내용이 질보다 양을 따질 경우엔 상황이 다를 것이다. 또한 일과 삶이 구분되지 않는 환경은 노동자를 더 피곤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문제가 극복되더라도 재택근무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근무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육아 문제로 고민하는 직원이나 사립에 따라 혼자 일해 집중할 때 생산성이 더 높은 경우 재택근무가 적합하다. 완전한 집단 근무, 완전한 재택근무로 정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유연한 제도를 시험해 보기를 제안한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대. 우리는 지금 향후 10년에 걸쳐 일어날 일들이 6개월 만에 변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코로나19가 수천 년 이어 온 인류의 문명을 바꿀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는 하나 변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 사람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을 추구해왔다는 것이다. 비대면에 따라 디지털 문명이 급격하게 대전환된다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서는 어떤 삶의 의미가 있을까.

社說

균형발전 역행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안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수도권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추겨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 소멸을 앞당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당정은 최근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물론 전세값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검토도 들어갔다. 흉남기 경제부총리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잇따라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물론 그린벨트 해체에 대한 여론 내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도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투기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모두 타당한 지적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역시 옛그제 성명서를 내고 "서울 그린벨트까지 해제해 가며 수도권 집중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과 양극화 해소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규제 해제와 각종 혜택을 통한 수도권 과밀화는 지역을 고사시키고 수도권 시민의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린벨트는 국토 환경 보전의 보루이자 미래 세대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유산이다. 더욱이 과거 정부에서도 서민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수도권 그린벨트를 잇따라 해제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되레 상승시키고 주택 안정화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지방의 입장에서는 수도권 인구 쏠림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강화해 지방 분산을 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갑질 방지법' 1년... 달라진 건 별로 없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하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을 넘겼다. 하지만 이른바 '직장 갑질' 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도 지지부진하다.

16일 한국공인노무사회 광주본부에 따르면 올 2분기(3-6월)에 접수된 광주 지역 직장 내 갑질 피해 상담 건수는 450건이 넘었다. 노동인권단체인 '직장 갑질 119'가 올 상반기 이메일로 전국에서 접수받은 직장 내 갑질 피해 사례도 1588건으로 월 평균 265건에 달했다. 갑질 사례는 폭행·폭언과 모욕·명예훼손, 따돌림과 차별이나 강요 또는 부당 지시 등이 많았다.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 신고했지만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거나 "처벌 규정이 없어 가해자는 별다른 제재도 받지 않고 마무리된다"며 하소연하고 있

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미흡하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업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사고과는 물론 본인과 같이 일할 수 없다"는 '협박'까지 당하는 일도 있다.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실태 또한 여전히 많다.

현행법의 한계도 있는데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회사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지만, 징차 갑질을 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 역시 문제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가해자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갑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데다 피해자가 대처하기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이 피해갈 수 없도록 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無等鼓

2100만 우리나라 인구는 2678만 명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 워싱턴대 연구진이 최근 의학저널 '랜셋'에 발표한 논문의 일부 내용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 현재의 인구(5164만 명)는 사실상 스페인-일본을 포함한 23개 국가의 인구도 절반으로 떨어진다. 세계의 출산을 또한 2017년 2.4명에서 1.7명까지 감소하게 된다. 연구진은 특히 전체 195개 국가 중 183개 국가의 출산율이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 혹여 자녀가 흡수제로 대물림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혼주의 확산과 1인 가구 증가가 이미 사회의 '트렌드'가 돼 버렸다. 결혼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해더니, 나이가 결혼 반도락이 난다. 스페인-일본을 포함한 23개 국가의 인구도 절반으로 떨어진다. 세계의 출산을 또한 2017년 2.4명에서 1.7명까지 감소하게 된다. 연구진은 특히 전체 195개 국가 중 183개 국가의 출산율이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결혼의 종말'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젊은이들은 출산을 포기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 신자유주의 시카고학파인 베커의 소비자 이론은 나름의 근거가 될 것 같다. 1992년 노벨상 수상자인 베커는 '출산의 기회비용보다 양육의 즐거움이나 노후 의존 등 효용이 커야 아기를 낳는다'는 논리를 폈다. 다시 말해 거액의 지출이 수반되는 교육 등을 감안하면 출산을 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강고한 자본주의 신분사회에서 젊은이들

이 혹여 자녀가 흡수제로 대물림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혼주의 확산과 1인 가구 증가가 이미 사회의 '트렌드'가 돼 버렸다. 결혼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해더니, 나이가 결혼 반도락이 난다. 스페인-일본을 포함한 23개 국가의 인구도 절반으로 떨어진다. 세계의 출산을 또한 2017년 2.4명에서 1.7명까지 감소하게 된다. 연구진은 특히 전체 195개 국가 중 183개 국가의 출산율이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2040광주 도시계획 이렇게

광주형 기본계획 거버넌스를 만들자



이용연
서영대 지역발전연구소장

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양한 주제 간의 갈등과 충돌이 더 크게 표면화되고 있다. 이에 도시 거버넌스 체제에서는 도시 계획의 형태와 기능, 그리고 달라진 권력 관계 지형에 대응할 새로운 계획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하며, 이것이 거버넌스형 시민 참여 계획이다.

시민 참여 계획은 계획의 목표 설정 단계부터 시민의 주장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화롭게 수렴하여 구체적 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물론 계획 대안의 설정과 선택 단계에서도 시민의 의견 수요 조사에 근거하여 전문가 집단이 대안을 설정한다. 아울러, 대안 평가 과정에서 환류 체계를 두어 대안의 수정, 보완이 가능해야 한다.

203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131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6개의 의제를 발굴, 부문별 계획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기본계획 과정에 처음 시도하여 시민의 관심과 의견 수렴의 성과를 올렸지만, 단기간의 활동과 제한적 참여로 격변하는 광주 거버넌스 환경과 도시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주민자치 활성화, 생활 밀착형 행정 수요에 혁신적이고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데 아쉬

움을 남겼다.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이 명실상부한 시민 참여형 계획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광주형 도시기본계획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광주 지역사회와 시민이 도시계획의 정책 결정 권한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 시대가 변하더라도 꼭 지켜야 하는 광주 도시계획의 일관된 원칙과 규범을 광주 도시계획 현장 제정으로 세워야 한다. 이는 광주의 시장과 시민이 함께하는 계획 규범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은 물론, 각종 분야별 계획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의 원칙과 지침으로 작용하게 한다. 이러한 계획 현장과 참여 계획의 절차와 방법은 광주시 도시계획 거버넌스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 계획단의 구성과 역할, 마을 계획의 반영과 위상, 지역별 시민 참여 방식과 시민단체와의 협력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의 5개 자치구가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발전 계획은 현행의 도시계획 체계에서는 행정 계획으로 법적 집행력과 구속력이 없는 정책계획, 청사진 단계의 계획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 광주시와 각 자치구가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 운동을 활성화하고,

각 마을(동)마다 마을 계획을 수립할 노력과 성과를 도시계획 체계 안에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집행력을 담보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광주시 도시계획 체계를 도시기본계획, 마을 생활권 계획, 도시관리계획 체계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시계획 체계의 개선은 도시계획 법제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면서, 행정상 도시계획 수립의 절차와 순서를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5·18 유산의 광주 정신에 도시 정체성의 바탕을 둔 광주시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시장'을 최우선의 덕목으로 실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시민+참여' '소통+배려'가 동력이다. 광주의 도시 비전과 미래성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이러한 덕목과 동력을 함께 담아내야 한다. 광주형 기본계획 거버넌스는 시행 과정에서 시정부와 공무원, 전문 계획가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은 물론, 관용과 절제, 인내를 요구하겠지만 이는 계획 집행 과정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시민의 공공성과 공동체 가치를 복돋아 민주 도시 광주의 품격을 높여 줄 것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광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